

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문 1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우리나라는 「지방자치법」에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.
- ② 관할지역의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·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, 교통·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.
- ③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.
- ④ 지역의 화재예방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.

**문 2.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은?**

- ① 등록면허세
- ② 담배소비세
- ③ 레저세
- ④ 자동차세

**문 3.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1952년 최초 시·읍·면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.
- ② 1999년 주민 조례 제정·개폐 청구권, 주민감사청구권이 신설되어,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.
- ③ 1994년 「지방자치법」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, 2004년 「주민투표법」이 별도 입법으로 제정되었다.
- ④ 2016년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.

**문 4.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 단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.
-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어느 하나의 계층에서 유지되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.
- ③ 단층제는 광역적 행정수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.
- ④ 단층제는 관할구역과 기능배분상의 중첩이 없으므로 해당 구역 및 기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- 1. ②
  -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사무가 자치경찰의 사무이다.
- 2. ①
  - 지방세기본법 제8조
    - 목적세(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)는 시·도세
    - 보통세의 종류

구분	도	시·군
특·광역시	취득세, 레저세, 지방소비세	주민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득세
구	등록면허세	재산세

정답 및 해설

- 3. ④
  - 2006년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0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.
- 4. ①
  -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.

문 5.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·도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이다.
- ② 서울시립대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이다.
-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·도에만 설치되어 있다.
- ④ 중앙정부 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더라도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다.

문 6.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배분 시스템만을 의미한다.
- ②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으로 중앙 정부 입장에서 특정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.
- ③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, 이 중 용도가 지정된 것은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이다.
- ④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.

문 7. 오츠(Oates)의 분권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ㄱ. 오츠의 이론을 따를 경우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 수록 효율적이다.
- ㄴ. 오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.
- ㄷ. 오츠의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.
- ㄹ. 오츠의 이론에 따르면,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8.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아른스타인(Arnstein)은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권한위임단계, 주민통제단계만을 주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.
- ② 주민감사청구는 상급기관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.
- ④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.

정답 및 해설

5. ③

-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·도교육감은 정무직공무원이다.
- ② 서울시립대의 교원은 특정직공무원이다.
- ④ 중앙정부 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더라도 신분은 국가직공무원이다.

6. ②

- ①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배분 및 지방정부 간의 재정배분 시스템을 의미한다.
- ③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, 이 중 용도가 지정된 것은 특별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이다.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용도제한이 없다.
- ④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완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④

- 오츠(Oates)의 분권화 정리:  
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던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던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.
- 오츠의 분권화 정리 가정
 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은 동일하다.
  -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는 없다.
  -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.

8. ③

- ① 주민권력적 참여: 대등협력, 권한위임, 주민통제
- ② 주민감사청구는 상급기관에(감사원 x)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④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.

문 9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
- ② 직장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
- ③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- ④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

문 10. 「지방자치법」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2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
- ③ 감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의 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 나기관은 해당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11. 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- ②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-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관한 사항

문 12.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. 감염병 예방</li> <li>㉡. 주민등록 관리</li> <li>㉢. 지정항만</li> <li>㉣. 중소기업 육성</li> </ul> |
|--|

- ① ㉠
- ② ㉠, ㉡
- ③ ㉠, ㉡, ㉢
- ④ ㉠, ㉡, ㉢, ㉣

정답 및 해설

9. ②

·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(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):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,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
- 2.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- 3.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
- 4.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

10. ①

· 지방자치법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제1항: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1. 모두 정답(기존 정답: ④)

·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(2022. 1. 13.)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·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: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(1)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- (2)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을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
- (3)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- (4)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12. 정답 없음(기존 정답: ③)

·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제13조로 조항이 변경되었다. 문제를 제9조 → 제13조로 수정한다면 기존 정답이 정답이 된다.

· ㉣. 지정항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.

문 13. 지방정치이론으로서 성장기구론(growth machine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도시개발보다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.
- ② “누가 통치하는가” 보다는 “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, 왜, 어떤 효과를 갖는가”가 연구과제이다.
- ③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지역에 근간을 둔 기업가와 임대 수입자에 한정된다.
- ④ 성장연합 구성원은 토지의 교환가치보다는 이용가치를 더 중요시한다.

문 14. <보기 1>의 재정지표와 <보기 2>의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?

<보기 1>

ㄱ. 재정자주도    ㄴ. 재정력지수    ㄷ. 재정자립도

<보기 2>

(가)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.  
 (나)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을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측정한다.  
 (다)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.

- |   |     |     |     |
|---|-----|-----|-----|
|   | (가) | (나) | (다) |
| ① | ㄱ   | ㄴ   | ㄷ   |
| ② | ㄴ   | ㄷ   | ㄱ   |
| ③ | ㄷ   | ㄱ   | ㄴ   |
| ④ | ㄷ   | ㄴ   | ㄱ   |

정답 및 해설

13. ②

-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보다는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춘다.
- ③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다.
- ④ 성장연합 구성원은 토지의 이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더 중요시한다.

14. ③

문 1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(당연적용 사업)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ㄱ. 공업용수도사업    ㄴ. 공원묘지사업  
 ㄷ. 자동차운송사업    ㄹ. 발전사업    ㅁ. 하수도사업

- ①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, ㅁ
- ③ ㄴ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ㄷ, ㄹ, ㅁ

문 16.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·군·구에 설치된 심의·의결기구이다.
- ② 분쟁 조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·의결기구이다.
-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②

- 지방공기업법 제2조(적용 범위):
  1. 수도사업(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)
  2. 공업용수도사업
  3.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)
  4. 자동차운송사업
  5. 지방도로사업(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)
  6. 하수도사업
  7. 주택사업
  8. 토지개발사업
  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지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
  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

16. ①

-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·도에 설치된 심의·의결기구이다.

문 17. 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ㄱ. 노력에 따라 신장가능성이 크다.
- ㄴ. 강제적으로 부과·징수된다.
- ㄷ. 지불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.
- ㄹ. 분포 차원에서 지역별, 연도별 격차가 크다.
- ㅁ. 수입원에 따라 세출용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.
- ㅂ. 현금 외에도 수입증지와 같이 다른 징수형태를 가진다.

- ①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, ㅂ
- ③ ㄷ, ㅁ, ㅂ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ㄱ, ㄹ, ㅁ, ㅂ

문 18. 제도적 보장설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다.
- ②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.
- ③ 국법에 의하여 수여된 권리이다.
- ④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권리이다.

문 19. <보기>는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이다. (가)~(라)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?

<보기>

- 지방의회는 (가)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(나)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-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(다)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(라)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	(가)	(나)	(다)	(라)
① 재적의원	재적의원	출석의원	출석의원	출석의원
	3분의 1	4분의 1	3분의 2	4분의 1
② 재적의원	재적의원	출석의원	출석의원	출석의원
	3분의 1	5분의 1	3분의 2	4분의 1
③ 재적의원	재적의원	재적의원	재적의원	재적의원
	4분의 1	5분의 1	4분의 1	4분의 1
④ 재적의원	재적의원	재적의원	재적의원	재적의원
	4분의 1	4분의 1	4분의 1	4분의 1

문 20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ㄱ.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ㄴ. 2021년 현재 경기도의 부지사는 3명까지 둘 수 있다.
- ㄷ. 서울특별시 중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.
- ㄹ.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은 2명까지 둘 수 있다.

- ①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ㄴ, ㄷ
- ③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ㄱ, ㄴ, ㄷ, ㄹ

정답 및 해설

- 17. ④
  - ㄴ. 강제적으로 부과·징수되는 것은 조세의 특징이다.
  - ㄷ. 세외수입은 지불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는다.
- 18. ④
  - 제도적 보장설 관점에서는 국가의 성립 이후에 형성된 권리이다.

정답 및 해설

- 19. ②
- 20. ④
  -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:
    1.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: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2.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: 2명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)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:
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,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